

광복절 의미와 자주국가를 지켜가는 길

교육의향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
위원장



올해는 광복절 79주년이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됐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광복 전후의 상황은 미국과 소련을 통해 전개된 군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체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됐으며, 이후 양측 모두 이념을 기입하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크게 다르다. 남한에서는 1945년 8월15일에 해방되고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으로 명명해 기념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 한다.

당시 전세가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돼 1943년 11월 말에 미국·영국·중화민국 3국은 소위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항복했고, 8월8일에는 미국과 영국, 소련이 모여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는데, 북한의 정진시에서는 소련과 일본이 서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한민족은 카이로 선언과 그것이 다시 확인된 포츠담 선언으로, 그리고 8월16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이 석방돼 여운형이 해방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 한민족의 오랜 투

쟁을 통한 민족의 극복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다.

서울 필동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1945년 8월15일 아침에 여운형이 이곳에서 총독부로부터 치안권과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그날 아침 여운형은 엔도 류사쿠와 교섭을 벌여 5개 조항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했다.

“전국적으로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서울의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것. 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해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 데 대해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해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물론 그날 중대 발표가 있으니 조선인들은 경청하라는 벽보가 나붙었으나 당시 라디오를 가진 조선인들은 많지 않았다. 더구나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발표 방송은 잡음이 심했고 어려울 한자가 섞여 있던 데다가, 결정적으로 일본 황족 어로 나왔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그러나 라디오로 방송된 문장과 개요가 당일의 신문에 기재되고 있었으므로, 일본 국민의 대부분이 패전을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비로소 조항 내용대로 형무소에 있었던 정치범과 경제범이 석방되기 시작했다. 그때야 서울시민들은 어제 방송이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방송인 줄 알게 되었고, 해방을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광복절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광복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광복절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둠에서 다시 빛을 찾아 국권 회복과 독립정신이 빛나는 날이다. 억압과 차별, 그리고 간혹한 수탈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의 시대를 열었던 날이다.

그럼에도 광복절은 건국절과 맞물려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일명 '건국절 논란'이다. 주로 쟁점은 “1948년 8월15일을 소위 '건국일'로 간주하는 주장이 타당한가?”이다. 연도를 제외한 월일은 1945년을 유래로 하는 광복절과 같은 날 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국가'와 '건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정식 정부 수립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 등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 시작한 것이었음을 헌법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복절은 건국의 의미를 포함해서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운 날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건국절 논란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중단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기념하고, 국민이 단결해 자주국가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광복의 노래를 모르고, 광복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른 채 그냥 휴일로 보내는 무지와 무관심이 더 문제이다. 더구나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 계승하는 독립운동기념관의 수장에 광복의 의미를 왜곡한 친일 인물이 선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공법 단체 광복회에서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독립정신을 훼손했던 김형석 관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광복절을 경축하고, 불행했던 일제강점기처럼 암흑의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필요할 때다.

社說

‘피항지 포화’ 시급한 전남 국가항 확대

잡은 태풍 속 항만시설 태부족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남권 선박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피항지 확충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피항지 기준을 충족하는 전남도내 항만·어항시설은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완도항 등 국가항 4곳과 여수 거문도항, 고흥 녹동신항, 고흥 나로도항, 강진 신마항 등 지방항 11곳이 그나마 피항지로 꼽힌다.

문제는 피항지 기능을 갖춘 국가·지방항의 규모가 커 선박 수용능력이 높다고 하지만 도내 1099곳 항만·어항시설 대다수가 태풍에 무방비인 소규모 항·포구로 이뤄져 있다. 도내 항만 선박등록 현황(2020년 기준)에 따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물류선박은 1285척으로 전국 선박(8877척)의 14.4%를 차지하고, 어선 수는 2만 7413척으로 전국(6만 5835척) 대비 41.6%에 달한다.

장마와 폭염이 끝나면 여름철 불청객인 태풍 발생이 높다. 매년 한반도

에 3~4개 태풍이 영향권에 든다고 한다. 피해도 발생빈도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해마다 증가세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발생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포화상태인 피항지 확대가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목포 삼진항과 보성 울포항, 신안 생김항이 올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에 선정됐다고 한다. 해수부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에 총 10곳 중 3곳이 전남지역이다. 이들 항구는 수산물·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려는 구상이지만 방파제 연장 및 확장 등을 통해 피항 기준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전남도내 피항지 기준에 맞는 항만시설은 태부족이다. 태풍 발효 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피항지 자리싸움이 치열하다. 신안과 완도 등 섬 어민들은 태풍이 발생하면 선박 안전을 위해 1~2시간 걸리는 목포권 항만·어항시설로 대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피항지인 국가항은 곧 어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지대다. 서둘러 국가항 확대가 필요하다.

과격 플랫폼으로 독창적 모델 만들어야

전남도 시2 서포터즈 모집

전남도가 시2 전남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에 나섰다. 전남사랑에 서포터즈는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도의 의미 있는 도전이다.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시나브로 다가오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전남도를 응원한다.

전남사랑에 서포터즈는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과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작했다. 6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도 50만 명이 이른다. 특히 이번에 시작되는 시2는 할인가맹점 확대와 정보제공 플랫폼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성장 등이 목표다. MZ 세대와 외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진다. 서포터즈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현재 259곳인 할인가맹점을 연말까지 1000 곳, 오는 2026년 6월까지 3000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인구감소는 전남도의 최대 난제다. 지난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하던 전남의 인구는 올해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특정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구'는 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전남지역 외에 거주하는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촉과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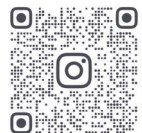
관건은 과격적인 서비스 플랫폼 강화에 있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관광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뻔한 내용'과 숫자에만 연연해서는 전남도만의 독창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과도한 관제(官製) 서비스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서포터즈와 커뮤니티와의 연결성도 높여야 한다. 전남도의 시도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전남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전남일보
E-Mail : jeb@jnilbo.com



서석대



1950년대 미국 갱 집단들 사이에서 용기를 과시하는 위험한 게임이 유행했다. 양쪽 참가자가 차를 타고 좁은 도로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마주 달리는 것이었다. 두 명 중 충돌하기 전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경기다.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은 겁쟁이라는 뜻의 '치킨'으로 몰려 명예롭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는데, 여기에서 치킨게임(chicken game)이란 말이 유래됐다.

치킨 게임은 그야말로 '이판사판'의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될 때 떠오르는 표현이다. 20세기 후반 미국-소련의 극단적인 군비경쟁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학 용어로 굳어졌다. 지금은 이해 당사자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극단적인 경쟁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실공방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은 지난 5일(한국시간) 시상식 직후 자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했었다"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부상 관리 부실, 비효율적 훈련 방식, 협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대회 출전 등 협회 운영을 저격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협회는 임원단이 귀국한 지난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세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무릎 부상에 대해 오진이 있었다는 안세영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불참 지시, 복식 경기 출전 중 용, 벌금 회피를 위한 국제대회 참가 지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올해 안세영을 전담했던 한수정 트레이너와의 계약 종료에 대해서도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한 트레이너가 파리를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안세영은 지난 7일 귀국 인터뷰에서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다음날 SNS에는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가 충분히 축하받은 후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협회와의 갈등 2라운드를 예고했다.

협회를 저격하는 폭탄 발언을 터트린 안세영과 그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협회의 진실 공방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을까 우려스럽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